

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공공자전거 효과 분석 및 발전 방안*

한국교통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0.31

<http://lib.koti.re.kr/search/KOTI.Detail.ax?cid=131455&sid=15>

공공자전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 및 기술개선, 요금의 다양화, 편의장치 보완 및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

- 배경
 - 공공자전거가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현재의 공공자전거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부족한 상태
 - 공공자전거가 효과적으로 도입·운영되기 위해서는 비용 및 기술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
- 효과분석
 - 공공자전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창원시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, 고양시에서는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.
- 발전방안
 -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 결절점과의 연계 및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구축
 - 공공자전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지원
 - 공공자전거와 스테이션 등에 부착하는 광고를 통한 수익증대 및 차등요금제 적용
 - 공공자전거와 관련된 제반 제도의 개선

* 본 보고서는 KOTI-Brief VOL.5, No.3(2013.2.22)을 통해 요약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http://www.koti.re.kr/board/publication/index.asp?code=publication_regular&cate=13&mCode=040500

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현황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보건복지 Issue&Focus 제 181 호 | 2013.3.15

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share/download_forum.jsp?bid=21&aid=242&ano=218

고령 1인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접근과 보편적 접근으로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, 독거고령자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전략이 요구됨

- 배경
 - 60세 이상 고령 1인가구는 2012년 147만 가구에서 2035년에는 410만 가구 예상
 - 고령 1인가구의 86.3%가 여성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음
- 정책적 시사점
 1. 사전예방적 접근을 통한 독거생활의 문제점 최소화
 - 노년기 진입 이전에 거주형태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
 - 독거노인의 사회적 통합 제고
 2. 독거고령자의 규모 및 기간증대에 대응한 보편적 접근
 - 모든 독거고령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구축
 - 독거고령자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민간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
 -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
 3. 고령자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
 - 저소득 독거고령자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 확보 및 현물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도움 제공
 - 독거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

대·중소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

산업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.31
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8&ord=0&pageNo=2&state=view&idx=35704

대·중소기업 간의 협력활성화를 위한 유인·보상체계 강화,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, 대·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 및 인식전환

- 배경
 - 2000 년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확대
 - 최근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전략의 하나로 대·중소기업 간 공생과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
- 대·중소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결과
 - 대·중소기업 간 생산성의 동반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효율의 제고가 필요
 - 기업 간 생산성 파급경로를 보다 선순환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·중소기업의 공동연구 추진, 현재의 인력관리 제도개선, 대·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제도 도입 등이 필요
- 정책적 시사점
 - 대·중소기업 협력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 및 세액공제 확대 등의 보상체계 강화
 - 공동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
 - 대·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 및 인식전환

원조 수원국 특성에 따른 ODA* 지원전략 구축에 관한 연구

한국행정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

http://www.kipa.re.kr/public/basic_report/basic_report_view.jsp?c=&pagenum=1&seqno=922&boardid=68&typeID=75&tableName=TB_TEST01&refid=

미래 지향적 원조배분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원조추진체계의 일원화, ODA 기본법 수정, 무상원조 비율의 증가와 비구속성 원조비중 향상, 인도주의적 관점의 ODA 증가가 필요

- 배경
 - 우리나라의 ODA 금액은 2010 년 11 억 7 천만 달러를 상회
 -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를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 규모는 미흡하고 효과성이 떨어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음
- ODA 배분전략의 평가결과
 - 우리나라 원조는 아시아 중심의 원조임이 분명하지만 수원국의 다양화가 필요
 - ODA 배분이 기타 저소득국 중심이지만 하위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증가가 필요
 - 정치·사회 안정에 관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행정제도의 질이 높은 수원국에 대한 지원증가도 필요
 - 친밀도는 중요한 배분요인이지만, 친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증가도 필요
- 정책제언
 - 원조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원조의 효율성 제고
 - 우리나라의 ODA 기본법에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기준 명시 및 위원회의 조정역할에 권위 부여
 - ODA 배분전략으로 무상원조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, 비구속성 원조비중 향상
 - 정보공개와 투명성제고를 통해 원조사업의 배분과정, 평가 및 환류시스템 개선
 - 인도주의적 관점의 ODA 증가 필요

* 공적개발원조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

중앙-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분담 방안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| 기본보고서 | 2012.12.31

<http://www.krila.re.kr/?code=research&subp=0101&bbsid=research0101&lcode=&mcode=&gbn=viewok&cate=&ps=10&sp=&sw=&gp=5&ix=5138>

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, 중앙정부의 복지재원 확충 그리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활성화와 제도개선

- 배경
 -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의 87.4%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 간 복지수준의 격차도 확대
- 정책제언
 1. 조세부담률 제고, 사회보장기여금 인상, 교육재정과 복지재정의 연계강화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복지재원 확충
 2. 중앙-지방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
 - ①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
 - 시·군과 자치구는 상이한 기준에 의해 차등보조율 적용단체 선정
 - 현행 차등보조율 적용시 차등화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격차 축소
 - ② 지방교부세제도 개선
 - 보통교부세 배분과정에서 사회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
 - 분권교부세 사회복지 이양사업 일부는 국고보조로 환원
 - 사회복지분야에 포괄보조금 도입
 - ③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편방안
 - 광역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기준재정수요에서 자치구 분을 분리하여 중앙정부가 자치구에 대해 직접 사회복지교부세를 교부
 - 자치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일부 사회복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광역시가 직접 수행
 3.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관련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개선

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| 기본보고서 | 2012.12.31

<http://www.krila.re.kr/?code=research&subp=0101&bbsid=research0101&lcode=&mcode=&gbn=viewok&cate=&ps=10&sp=&sw=&gp=5&ix=5140>

타당성조사 기구의 법적기반 마련,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재편,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개선, 심사기준의 합리화, 전담조직 설치

-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
 - 부실 지방투자사업을 검증하고 제어해야 할 타당성조사가 매우 부실
 - 투융자심사 제외사업이 과다하거나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실효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관행이 잔존
 - 투융자심사 통과 이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부실
 -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곤 전담조직의 부재
- 개선방안
 - 타당성조사 총괄기구의 설치근거와 역할, 수행체계, 예산지원 등의 법적기반 마련
 - 내부통제기제의 강화 수단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재편
 -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개선
 - 심사기준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
 - 사후관리 전담조직의 설치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

국토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.31

http://www.krihs.re.kr/html/2_paperInfo/report_pdffile_view.asp?file_name=0000061241.pdf

산업단지 유형구분 체계의 개선, 산업시설용지 면적기준의 완화, 도시형 임대산업입지의 개발촉진, 녹색산업입지의 개발, 민간자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

- 배경 및 주요 결론
 - 대도시에서 제조업 감소에 대응한 신성장산업의 기반확보 전략이 필요
 - 대도시 산업의 유지·발전을 위해 공업지역의 관리 필요성 부각
 - 기존 산업클러스터의 재생 및 구조고도화에 정책적 관심 필요
-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
 - 산업입지 개념의 확대와 유치기능 중심으로 산업단지 유형구분 체계의 개선
 - 산업단지 입주기준 완화와 용도의 복합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면적기준의 완화
 - 도시형 임대산업입지의 개발촉진
 - 국고지원 대상 산업단지의 규모 조정
 -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집적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에 준하여 관리
 - 도시환경 및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산업입지 개발
 - 중심 대도시와 근교지역의 기능분담을 고려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
 - 민간자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
email: urbandata@si.re.kr
phone: 02-2149-1022